

꽤 막힌 '공수처 출범' 물꼬 트일까

민주 "공수처·특별감찰관·북인권재단 후보 일괄 타결하자"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후 공수처 추천" 역제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촉구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며 맞바야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특별감찰관 후보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동시 추진'이라는 일괄 타결안을 다시 거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긍정적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됐고,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 숫자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정치적인 속에서 동시에 추진해 일괄 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서 "관련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특감관 후보 추천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합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감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감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 (임명)을 진행하게 돼 있다"며 "늘 여야 1명씩 추천하자고 해왔다.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자기들이 추천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특감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

각 추천하고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특감관 후보 추천이 먼저라고 맞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법상 하게 돼 있는 특감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예결위 "바쁘다 바빠" 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추경호 소위원장(가운데) 주재로 제4차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협치' 운 띄워놓고...여야, 연일 '추미애' 격돌

민주 "실체 없는 의혹 뿐"...국민의힘 "문 대통령 결단 내려야"

여야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제2의 조국 사태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휘발성이 큰 '공정성 이슈'로 몰고 가면서 문 대통령의 아들도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종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묵인하는 것처럼 태도를 가지는데,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의원도 회의에서 "추미애 리스크는 더 봉합이 되지 않는다"며 "천여 매체인 MBC·KBS·한겨레·경향신문 등도 더 이상 추 장관을 보호해줄 수 없다. 야당 의원실에 이들 천여 매체의 자료요청이 쇄도하

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는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마음에 빛이 없다'면 손절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빛을 졌다'고 말한 것을 빌려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을 한 데 묶어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야권의 십자 포화가 쏟아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논란과 관련해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다"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허위가 명백한 사실도 폭로란 이름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언론은 재판관이 아니다. 확인된 사실은 의혹만큼

동일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추 의원)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에 시험을 치지 않고 '백'으로 들어갔다면 분노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대응하거나 개입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정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군의 해명도 추 장관 아들 측 해명도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공식적인 발표로 서씨 측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정치 공방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로 냉정하고 차분하게 살펴야 한다"며 "공수처가 시행됐다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던 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의혹 초반 추 장관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일을 키웠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수석사무부총장에 권칠승 민주 중앙당 추가 인선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수석사무부총장에 권칠승 의원을 임명했다.

또 조직부총장에는 김형민 의원을, 미래부총장에는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장은 정태호 의원이 맡게 됐다.

대외협력위원장은 김주영 의원, 법률위원장은 김희재 의원이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 김현정 노동대변인, 박성현 박진영 남영희 상근부대변인 등 대변인단 추가 인선도 이뤄졌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끄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한창에 정책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총괄본부장은 이광재 의원, 총괄본부장은 유동수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이낙연 "윤영찬 카카오 문자 부적절"

윤영찬에 공개 경고...국민의힘 "포털 관계자 호출은 갑질"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문자'와 관련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은 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중진의원 회의에서 "포털도 언론"이라며 "지금도 보도지침 시대, 언론 통제 시대 아닌데 국회의원이 대놓고 (포털 관계자를) 국회에 들어오라 말라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고 서슬 퍼런 갑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압박 문자'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 관련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의원에게 알아보니 우리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야당의 대표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모든 의원이 국민의힘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세심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 기자 kroh@

김희재 "조수진 '재산 신고 문제' 주장은 허위"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9일 조수진 의원이 제기한 재산 신고 문제와 관련해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는 조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내용만 제대로 확인해도 전세 취득 일자가 '2020년 5월 6일'로 나와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조 의원이 본인의 재산신

고 누락 잘못이 있다면 논점을 흐리려고 할 게 아니라, 경계 없이 성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만큼 4차 추경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복 기자 kroh@

광주 출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선임

광주 출신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임됐다. 정의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로 강은미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역 예산을 챙겼고, 당 차원에서 호남 예산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지역 상생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더 굳건하기만 한 온갖 성 차별과 문자 폭행에 노출된 여성들의 목소리와 3포, 7포 세대로 전락 한 청년들의 목소리, 같이 살자고 울부짖는 장애인들의 절규 등이 거침없이 소용되는 국회가 돼

아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의당 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역임했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생명안전포럼, 국민총행복포럼, 동물복지국회포럼, 한반도평화포럼 등을 통해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에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혜영 의원을 임명했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인권위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민

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법체계적 측면에서도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